

우리은행 상반기 300명 채용

하반기에도 450명

우리은행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올해 상반기 300명을 비롯해 총 750명을 채용한다. 이번 채용은 일반직 신입행원 공개채용(250명)과 사무지원직군 특별채용(50명)으로 진행된다. 일반직 신입행원의 서류접수는 18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며, 사무지원직군의 서류접수는 지난 16일 완료됐다.

일반직 신입행원 채용은 나이, 학력 등에 제한없이 지원 가능하며, 서류전형, 필기전형, 1차 면접, 인성검사 및 2차 면접 순으로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은행 홈페이지 채용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우리은행은 이번 채용부터 부문별 직무를 6개에서 9개로 세분화했다. 기존의 일반 부문 대신 개인금융, 기업금융, 글로벌부문을 추가해 지역인재, WM(자산관리), IT, 디지털, IB(투자은행), 리스크-자금과 함께 9개 부문으로 진행한다. 장애인, 보호대상자, 관련 분야 전공자, 직무관련 자격증 보유자, 여학 우수자 등을 우대한다.

하반기에는 직업계고(특성화고) 졸업예정자와 일반직신입행원 등 총 450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이나라 기자
naileehappy@meconomynews.com

선거철 다가오니… 돌연 은행 자영업대출 조사

‘최저임금’으로 자영업 압박하던 금융당국
은행의 과도한 보증·담보 요구 집중 조사
“평소 소상공인 외면하다 이제와 왜 그러나?”

금융당국과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의 자영업자 대출에 대해 공동 검사에 착수한다.

최저임금 문제를 놓고 지난해 말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와 대립각을 세웠던 정부가 선거철이 다가오자 뒤늦게 민심을 수습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은 15일부터 신한은행을 시작으로 KB국민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자영업자 대출 취급 실태를 점검한다. 금감원과 한국은행이 공동검사를 벌이는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 한국은행이 공동검사를 요청했고 금감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공동검사와는 별개로 금감원은 다음달 KB국민은행에 대한 종합검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당초 종합검사 전후 6개월 간은 부문검사를 하지 않기로 했지만 한국은행과의 공동검사는 예외에 해당한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대출 취급 과정에서 자영업자들에게 과도한 보증·담보를 요구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한국은행은 통화정책 관련 규정

을 중심으로 시중은행을 들여다볼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빠른 속도로 증가한 자영업자 대출을 위험 요인으로 지목한 바 있다. 지난해 자영업자 대출 증가율은 상호금융권역이 31.9%로 가장 높았고 저축은행 31.5%, 은행 8.6% 등이었다. 금융권의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말 기준 0.61%로 1년 전보다 0.10%p 높아졌다.

문제는 자영업자 대출이 급증한 근본 원인이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기인(起因)한다는 점이다. 또한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에 따른 경기침체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이중고(二重苦)로 작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자영업 폐업률이 앞으로 지속될 경우 개인 차원의 빈곤 문제에 가계부채 확대 등 거시경제 불안 요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는 상황이다.

최근 산업연구원은 “자영업자의 생존 가능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정부 차원의 서비스 연구·개발(R&D) 활성화 방안이 시급하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금융당국과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의 자영업자 대출에 대해 공동 검사에 착수한다. 사진은 최성일 금융감독원 부원장님. 사진=이기룡 기자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행 대출 조사가 아닌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저임금 처등 적용이나 주휴수당 폐지 문제와 같이 자영업자들의 생존이 달린 문제를 외면하면서, 시중은행에 책임을 전가하듯 대출 문제를 압박하는 정부의 제스처에 강한 불만을 나타내는 것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31일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시키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자영업자들은 강력 반발하며 헌법소원 청구로 맞불을 놔다. 이들은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결국 범법자로 내몰았다”고 질타했다. 이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상공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최저임금 문제와 주휴수당 폐지 건의에 대해 사실상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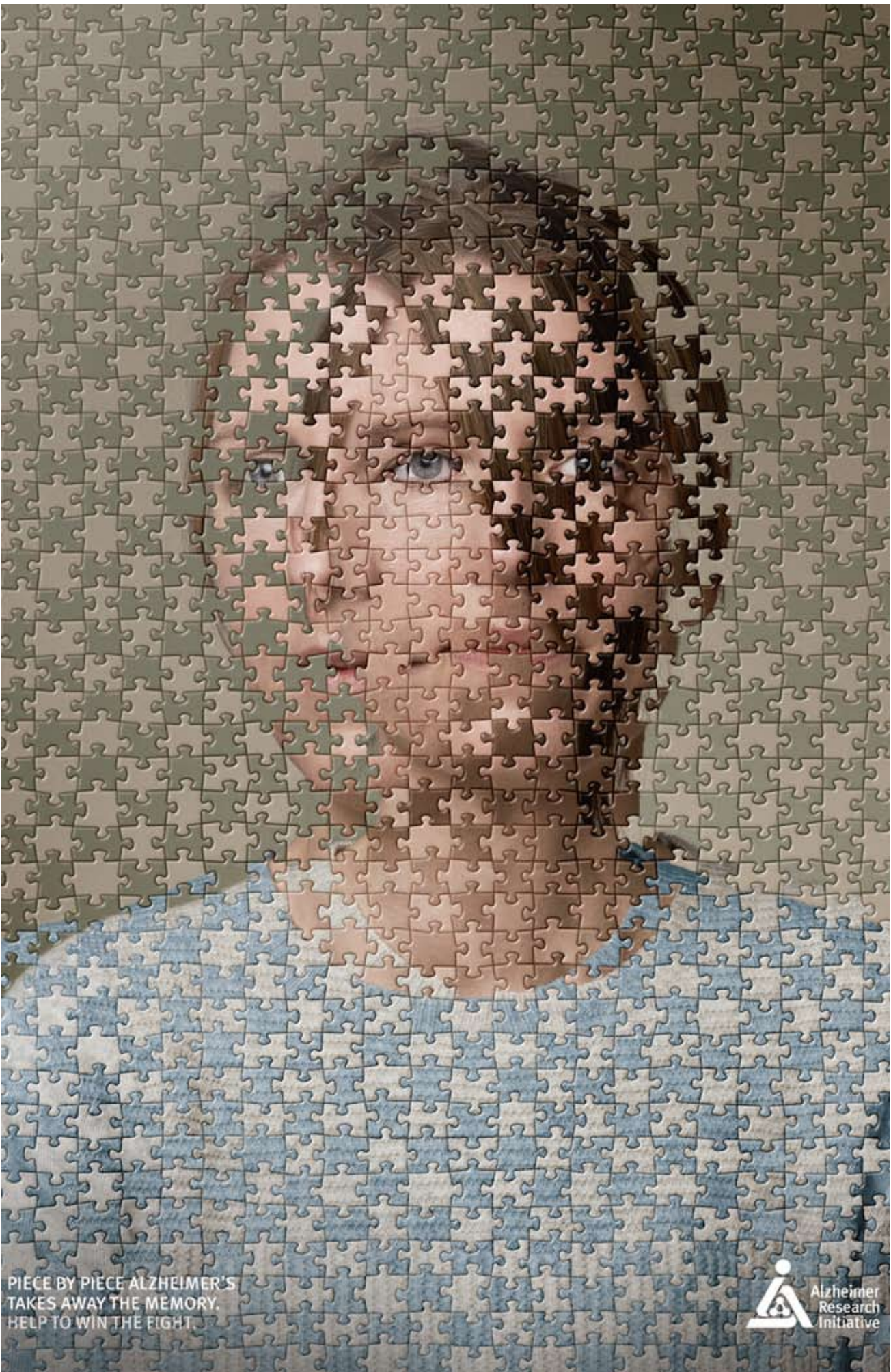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평소 정부가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왔으면

모를까 이제와 시중은행의 자영업대출을 들여다본다고 하니 충선이 다가왔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사실 지난해를 기준으로 보면 시중은행보다 제2금융의 자영업자 대출이 훨씬 크게 늘었음에도 국민들의 인지도가 높은 4대 은행을 타깃으로 삼겠다는 의도 역시 뻔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오창균 기자 crack007@meconomynews.com

Cannes Lions 수상작 지면 전시



Industry Craft Silver Lion Campaign
Title: ANIN-KATRIN 안-카트린
Client: ALZHEIMER RESEARCH INITIATIVE 알츠하이머 연구기관
Product: CALL FOR DONATIONS 후원 및 기부 요청
Agency: BBDO GROUP GERMANY, Dusseldorf
Piece by piece ALZHEIMER'S takes away the memory. Help to win the fight. 조금씩 기억이 사라져 갑니다.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카드 수수료 강제로 내리니 이번엔 노조가 반발

노조 “카드사 8천억원 손실… 수수료 하한 정해 수익보전을”

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와 카드사 노동조합협의회는 12일 금융위원회에 500억원 초과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하한선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다음달 말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날 서울 을지로 동아빌딩에서 열린 기자회견회에서 허권 금융노조 위원장은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으로 카드사가 8,000억원의 손실을 볼 것”이라고 규탄했다.

그는 “최근 금융당국이 내놓은 대책이 카드업계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면서도 “금융위원회 의 카드 산업 대책은 이 손실을 어떻게 보전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카드사 노조는 수익 보전 방안으로 ▲대형가맹점 수수료를 하한선 설정 ▲레버리지 배율 상향 ▲부가서비스 축소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다른 업권과 달리 레버리지 규제가 심하다는 게 카드업계의 주장이다. 현재 카드사는 레버리지 배율이 6배이지만, 캐피탈사는 10배에 달한다.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카드 노동자 생존권 사수 투쟁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시장경제DB

금융위는 지난 9일 발표한 ‘카드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고비용 마케팅 개선 방안’에 레버리지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카드사 측은 미흡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배율 상향 대신 레버리지 배율을 계산할 때 총자산에서 중금리 대출과 빅데이터 신사업 관련 자산만 제외해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카드와 롯데카드는 레버리지 배율이 각각 6.0배, 5.8배로 한도에 가까워져 대출자산을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들은 우선 대기업 가맹점들의 우월

적 지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수수료 하한선과 강력한 처벌 조항을 만들 것을 주장하며 국회를 상대로 입법요구 투쟁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연간 수십억에서 수백억 적자가 쌓이는 상품에 한해서 부가서비스를 축소하는 방안을 즉각 시행해달라고도 했다.

금융공투본과 카노협은 요구사항이 5월 말까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총파업 전진 대회를 시작으로 전면 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배소라 기자
bsrgod78@meconomynews.com

금감원 종합검사 첫 타깃은 국민은행

작년 민원·사고 많아 1순위
5월 현장검사… 다음은 신한

금융감독원이 4년 만에 부활시킨 종합검사의 첫 타깃으로 KB국민은행을 선정해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부실 딱지가 찍히면 죽는다’는 인식 때문에 국민은행은 안절부절할 수밖에 없다. 금융사를 살살이 들여다볼 수 있는 종합검사는 금감원이 피감기관에 행사할 수 있는 가장 크고 날카로운 칼로 비유된다. 지난 2015년 각종 부담으로 인해 종합검사가 폐지된 것만 봐도 그 강도가 얼마나 센지를 알 수 있다.

당초 시중은행 중에서는 국민은행 외에 신한은행이 종합검사 후보군으로 꼽혀왔다. 두 은행은 최근 금감원으로부터 세부적인 검사를 받지 않은 데다 채

용비리 논란에 휘말렸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상반기 국민은행에 이어 하반기 신한은행을 대상으로 종합검사를 벌이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종합검사에 필요한 사전자료를 검토한 이후 이르면 다음달 초부터 국민은행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이 신한은행을 후순위로 미뤄두고 국민은행을 종합검사 첫 타깃으로 삼은 가장 큰 요인은 금융소비자 보호 부문에 대한 평가로 해석된다.

지난해 주요 시중은행 가운데 민원이 가장 많았던 곳이 바로 KB국민은행이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민원만 221건(금감원 등에 접수된 대외민원 기준)을 기록했다. 이어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이 각각 158건, KEB하나은행이 137건으로

집계됐다.

민원건수는 금감원의 종합검사 대상 평가 지표 중 금융소비자 보호 부문에 해당한다. 금감원은 앞서 종합검사 평가 지표로 금융소비자 보호(30점), 건전성(30점), 내부통제·지배구조(30점), 시장영향력(10점)을 확정하 바 있다.

금융소비자 보호 부문에 포함되는 중소기업 신용대출 비중도 어느정도 순위 선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은행이 포용적 금융을 얼마나 실현했는지를 보기 위해 중소기업 신용대출 비중을 평가 지표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대출 중 신용대출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신한은행(28%)이다. 다음으로 KEB하나은행(20%), 국민은행(18%), 우리은행(14%) 순이다.

오창균 기자 crack007@meconomynews.com